월/요/광/장

강희숙

국제결혼 이주민 대책 문제 많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다양한 유형의 소수자 집단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책 내지는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 가정의 결혼 이주 여성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도입과 문식능력(文識能力), 곧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회계층을 위하여 한글을 가르치는 문해교사(文解敎師)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이 그 좋은 예라고 할 것이다.

소수자 집단이라 함은 문자 그대로 다수가 아닌 소수로 이루어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하지만, 모든 소수가 다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정치·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나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든, 우리 사회가 그와 같은 소수자 혹은 소외계층을 위해 따뜻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상당한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역량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른바 복지 사회로의 전환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삶과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능의 수행을 요구하는 바, 그러한 제도적 기능의 발휘를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자신의 능력과 자아를 최대한 계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모로 다행스럽다.

문제는 결코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는 복지정책들이 졸속행정으로 인한 업적주의로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한 채 예산만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요즈음 각 지자체들에는 다문화 가정의 지원을 위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확보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예산의 집행이 어떠한 순서로, 무엇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행정가들의 고민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사실,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그 가정이 속한 사회공동체에서 자신들이 꿈꾸던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주 여성들보다도 그들을 신부로, 며느리도 받아들인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그들이 누구인가를 이해시키는 일부터 선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모국어가 어떠한 특성을 갖는 언어이며, 그들을 키워낸 역사와 문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우리말과 문화에 대한 적응만을 강요하는 것은 결혼 이주 여성들의 편에서 보면 엄청난 사회적 폭력이 아닐 수 없다.

상호 이해가 아닌 일방적 동화의 강요, 이는 그들로 하여금 개인적 정체성은 물론 민족적 정체성마저 잃게 하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실을 운영하는 일은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와 문화 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그동안 주로 자원봉사에 의존해 온 한국어교실의 운영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질 높은 한국어교육을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한국어 교사들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한국어교실이나 지역 내의 대학과 연계한 전문적인 교사 양성과정의 개설 및 운영 등이 시급하다.

급하니까 우선 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은 곤란하다.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인력에만 의존하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교육 대상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 사회적으로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갖도록 하는 여러 가지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한편, 새로운 교사의 양성과 확보를 위한 대책 또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은 모두 행정 전문가들의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바, 모름지기 고민 많은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본다.

〈조선대 국문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 설

대선후보 난립 국민의 선택이 중요하다

제 17대 대통령선거 후보등록이 25일 시작됐다. 오늘까지 중앙선관위에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내일부터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착수하게 된다. 전국이 본격적인 대통령선거 열풍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대선 정국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예비후보 151명 가운데 첫날 9명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3대 대선 이후 최대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과 보수진영이 단일화에 실패해 이처럼 복수 후보가 난립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범여권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민주당 이인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보수진영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출마,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진보진영 대표로 3수에 나섰다. 군소후보들을 무시해도 역대 대선 중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의 대선 양상과는 판이하다. 보수진영 후보의 지지율이 60%대에 이르고 있는 반면 범여권 후보들은 지리멸렬한 모습이다. 김대중 대 이회창, 노무현 대 이회창 식의 양자 대결구도는 찾아볼 수 없다. 유권자들은 전례없는 상황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책대결이나 정당정치는 사라졌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깎아내리려는 네거티브 전략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대선정국의 핵심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BBK 주가조작사건 연루 의혹'이다. 검찰의 수사결과에따라 선거판이 요동을 치게 될 것이 틀림없다.

대선정국이 어지러울수록 유권자인 국민의 판단이 중요하다. 특히 역대 대선에서 풍향계 역할을 해온 호남의 선택은 주시의 대상이다. 국민들은 어떤 후보의 말이 진실인지, 누가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호'를 이끌 적임자인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광주 저병원성 AI 방역 철저히 해야

〈조류 인플루엔자〉

광주지역 한 오리농가에서 저(低)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6개월 만에 또 발생했다. 다행히 이번에 확인된 AI 바이러스는 폐사율이 낮고 인체 감염 위험이 없는 저병원성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당국은 방역을 철저히 해 확산을 막는 한편 근거 없는 불안으로 관련 산업이 타격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북구 용두동 일대 오리농가 4곳에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생했다. 시와 방역당국은 즉각 농가 4곳의 육용오리 1만6천950마리를 매립 살처분하고 방역작업을 벌였다. 또한 해당 농가의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한편 감염 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에 나섰다.

이번에 발견된 AI 바이러스는 저병원성인데다 방역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소비자의 불안을 많이 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AI은 감염속도가 빠른데다 그 경로마저 밝혀지지 않아 자칫 피해가 일파만파로 번질 수 있다. 더욱이 저병원성 AI이라고는 하지만 방역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고(高)병원성 바이러스로 변이될 수 있어 보다 철저한 방역이 요구된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4개월여 동안 전국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축산농가는 물론 음식점 등 관련산업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당국은 이번에 광주에서 발생한 저병원성 AI가 고병원성으로 변이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소비자들이 근거 없는 불안에 휩싸여 피해를 키우는 것이다. 저병원성 AI는 인체와 가축 감염이 없는 데도 벌써 광주시내 오리 관련 식당은 매출이 50% 이상 감소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당국은 저병원성 AI의 무해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비자들도 지나친 불안으로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법조 칼럼

차승우

진실 규명 방해하는 '사실확인서'

검사 윤리강령 첫머리에 '검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의 지배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롭고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와 같은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여러가지 행동 준칙을 제시하고 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범죄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정당한 법령을 적용해 국가형벌권이 적정하고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생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법령 적용과 국가형벌권의 실현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규명, 즉 실체 진실을 확인할 때 가능할 것인데, 수년간 검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체 진실 발견의 어려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가는 느낌이다.

특히, 고소사건의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사기·횡령 등의 재산 범죄의 경우에는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이 상반돼 사실관계 규명에 어려움이 있고, 더 나아가 양 당사자가 제출하는 제3자 명의의 사실확인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빈번하다.

원래 사실확인서는 어떠한 상황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경험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문서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건의 경우 본래 의미의 사실확인서(事實確認書)가 아닌, 그 문서의 작성을 부탁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미리 작성해 제3자에게 서명·날인을 받아 제출하는 사실확인서(私實確認書)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범죄의 성립 여부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사실확인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날인하는 사람이 그 내용조차 읽어보지 않았다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주었다는 진술을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해 왔다.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 명의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연락조차 피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러한 경우 신속한 수사를 통한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며 그것은 곧바로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한편,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확인서가 횡횡하는 이유를 정에 이끌리는 국민적 정서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필자는 자신의 이름에 대한 스스로의 존중이 부족한 탓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름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법오락실의 속칭 '바지 사장',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통장 개설 판매자 등 자신의 이름에 대한 스스로의 존중 부족으로 나타나는 범죄 유형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는 사실확인서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나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존중하는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어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고 그에 따른 적정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고, 이와 같이 올바른 법률문화의 정착은 결국 국민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는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만이 제출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의 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한 것일까를 자문해 본다.

〈광주지검 검사〉

기 고

장태기

스포츠 산업, 지역경제 살찌운다

스포츠의 발전 방향은 '고도화'와 '대중화'가 있다.

스포츠 고도화는 스포츠의 기술, 기록의 향상을 목적으로 인간의 극한에 대한 도전을 추구하는 엘리트 선수 중심이다. 이와는 반대되는 개념인 대중화는 체육활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고 건강이나 사교로 영위하는 스포츠다. 고도화는 경기를 위주로 하는 스포츠를, 대중화는 생활 스포츠와 관련해 이해하면 쉽다.

최근 스포츠 패러다임 변화의 가장 큰 추이는 전통적인 스포츠에서 마케팅 방향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또한 스포츠는 IT(정보통신), 건강, 미디어, 관광, 문화, 요식 등 기존 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콘텐츠로서 21세기 지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동안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엘리트 체육 위주에서 지방자치제 시행과 함께 지역 주민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여가시설의 확충,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마케팅을 활발하게 전개해 스포츠산업 육성 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관광산업, 문화산업 등 전반적인 산업발전을 꾀할 수 있다.

스포츠 산업의 구체적인 효과를 보면 먼저 경기장 입장 수입, 캐릭터 판매 등 직접적인 수입이 있다. 다음은 국내·외 사람들이 스포츠 이벤트에 참여함으로써 관광수입과 지역 홍보 효과를 들 수 있다. 또 부수효과로는 스포츠 산업 기반구축과 행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고용창출을 비롯해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시설의 유효 이용효과가 있다.

여기에다 스포츠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새로운 문화적 효과와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공익 효과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에도 기여한다. 즉 스포츠 이벤트 참여를 통해 주민들의 애향심, 자긍심, 지역에 대한 이해의 향상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고 결국 지방행정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전남도에서는 스포츠 산업이 굴뚝 없는 산업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활발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국단위 체육대회 및 동계 전지훈련 팀 유치로 연인원 64만 4천여명이 방문해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652억원에 이르렀다. 또 전남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내년에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에 나선다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1천200억원을 초과 할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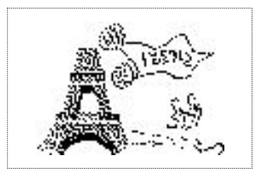
또한 체험형 스포츠 관광 효과와 주민 여가 충족을 위한 래프팅, 행글라이딩, 산악자전거 등과 같은 모험스포츠, 위험스포츠도 적극 개발하면 부수적인 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온화한 기후와 맛깔스러운 남도 음식, 넉넉한 인심으로 명성이 높은 전남은 전지훈련 팀은 물론 전국대회 규모의 체육행사 개최 장소로 최적이다. 이같은 여건을 십분 활용해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 한다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데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

無 等 鼓

여수 세계박람회



1851년 5월 1일, 런던만국박람회 개막식이 열렸다. 최초의 세계박람회였다. 사람들은 런던 한복판에 만들어진 거대한 전시장의 위용에 넋을 잃었다. 축구장 11개 넓이의 3층짜리 유리·철골 구조의 전시장은 '수정궁'(Crystal Palace)이라고 불리었다. 산업혁명기 첨단기술로 만들어진 1만3천여개 출품작도 관람객들을 열광시켰다.

첫번째 박람회는 영국에서 치러졌지만 박람회를 최대한 활용한 나라는 프랑스다. 프랑스는 영국에 이어 1855년 두번째 세계박람회를 치른 것을 비롯, 1900년까지 반세기동안 4차례 박람회를 개최했다. 프랑스는 제국주의와 산업혁명으로 이룬 부를 박람회에 쏟아부으며 프랑스의 자존심을 구가했다.

19세기에 열린 파리박람회는 파리 최고의 명물 두가지를 남겼다. 바로 에펠탑과 파리 지하철이다. 에펠탑은 1889년 파리박람회를 위해 건설됐다. 철교 건설전문가인 귀스타브 에펠에 의해 1887년 공사가 시작됐으며 1889년 3월 31일 완공됐다. 파리는 '과학과 산업의 승리'라는 에펠탑 옹호파와 '추악한 철덩어리'라는 비판자로 갈렸으나, 에펠탑은 파리를 상징하는 건축물로 지금까지 건재하다.

파리 지하철은 1900년 박람회를 맞아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에펠탑처럼 파리 시민들의 외면을 받았으나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문화감각이 뛰어난 지하구조물로 꼽힌다.

박람회는 국력의 경연장이다. 후발 강대국인 독일과 미국이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것도 하노버, 시카고 박람회 이후부터다. 일본도 1970년 오사카박람회를 통해 2차 대전 패전국가의 멍에를 벗었다. 우리나라는 조선 말기인 1893년 시카고박람회에 참가하면서 박람회와의 인연을 맺었다.

27일 새벽 박람회의 원조격인 파리에서 210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BIE(세계박람회기구) 총회가 열린다. 런던박람회 이후 64번째가 될 여수 박람회의 유치 성공을 기원한다.

/오주승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휴대폰 가입은 오후 6시 이후에도 되는데 해지는 왜 안되나

휴대전화가 고장나 전화기만 바꾸려고 집 인근 판매점을 찾았다가 직원 말을 들으니 기존 번호를 해지하고 신규가입을 하는 것이 저렴한 것 같았다.

특히 새로 가입을 하게 되면 신규 번호 안내 서비스가 1년간 무상으로 서비스가 이뤄진다고 해 직장·거래처 등에 신규 번호를 알려야 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새로 가입을 했다.

그런데 오후 6시가 넘어 그날 기존 번호에 대한 해지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다음날 기존 번호를 해지한 뒤 연락 주겠다는 직원 말만 듣고 돌아 왔는데 몇 일이 지나도 착신 금지로만 되어 있을 뿐 해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알아보려고 연락을 했더니 그제야 대리점을 통해 연락을 취했다. 그러면서 신규 가입은 오후 6시 이후에도 가능하면서 해지는 오후 6시전, 대리점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가입할 때 이같은 안내를 들어보지 않았다. 미리 알았다면 조치를 취해 그 기간 동안 중요한 전화를 받지 못한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뤄지는 서비스를 기대한다.

▲이영인·광주시 북구 양산동

기술개발 없이 車 연식만 바꿔 가격 올리는 상술 그만둬야

자동차업체들이 신형 모델을 출시하면서 수백만원까지 가격을 올린다. 신형모델 차량뿐만 아니라 같은 기종의 연식 변경이라는 명목으로 가격을 조금씩 올리기도 한다.

특소세 인하조치로 차량 가격이 낮아졌다는 국민들의 생각을 교묘히 이용한 자동차들의 상술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또 예전에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옵션 품목들을 기본 장착품으로 바꾸면서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정한 기술적인 개발 없이 연식만 변경하여 가격을 올리는 자동차 업체들의 관행은 자제해야 한다.

▲최명연·광주시 서구 유촌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AX	02-773-9335〉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